

코로나19와 4·15총선

정경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20.5.27.

민주노동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보고서는 민주노동 홈페이지(<http://www.nodong.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문의: 민주노동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주소: 04518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전화: 02-2670-9220 전송: 02-2635-1134 이메일: kctu-li@nodong.org

민주노동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및 이슈페이퍼는 민주노동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요약〉	1
1. 들어가며	6
2. 거대양당 180석 대 103석의 의미	7
3.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11
4. 코로나19와 대안사회, 그리고 권력관계	19
5. ‘노동’의 부재,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것인가?	23

요약

전태일 열사 50주기, 전노협 창립 30주년, 민주노총 창립 25주년, 민주노동당 창당 20주년인 2020년에 이루어진 4·15총선 결과는 노동운동세력을 포함한 진보정치운동 세력에 게 엄중한 평가가 요구된다. 28년 만의 최고치 투표율 66.2% 속에서 이루어진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와 미래통합당의 참패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이 지지했던 진보정당들은 군소정당화되었다. 이 보고서는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정당 정치를 위한 연구과제를 탐색하는 단계로, 이번 총선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거대양당 180석과 103석의 의미

4·15총선은 더불어민주당 180석, 미래통합당 103석의 결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에 서의 2016년 20대 총선, 촛불운동 이후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와 2018년 7대 지방선거 에 이어 코로나19 사회재난에서의 21대 총선까지 보수우익정당은 모두 제2당으로 참패했 다. 한국사회 변화를 원하는 유권자의 힘으로 이루어진 결과다.

더불어민주당 180석과 미래통합당 103석의 결과는 제3당 없는 거대양당체제 성립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은 더불어민주당계 정당투표(더불어시민당 33.3%, 열린민 주당 5.4%) 득표율 38.7%과 미래한국당 득표율 33.8%는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소한 표차라도 1위 후보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 효과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미 래통합당은 선거에서 참패했으나 보수우익정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세력의 존재감을 드 러냈다. 그리고 그 외 진보정당들과 보수중도정당들은 군소정당화되었다.

그렇다면 거대양당체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우익세력을 제외한 ‘왼쪽’ 공간 정치세력과 진보적 대중의 대표성을 가지는가? 더불어민주당은 진보정치세력의 대표성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역동적 요구를 담아내지 못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왼쪽’ 공간의 진보적 대중의 대표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정당의 이데올로기 때문이다. 분단 체제와 독재 체제의 ‘민주-반민주’ 구도에서 획득한 자유주의 더불어민주당의 ‘진보성’은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며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와 대중의 계급적 이해를 담아내지 못한다.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패권국가의 세계 안보 체계와 신자유주의 질서를 수용하고 따르는 한 이에 저항하는 민중의 계급적 이해 또한 담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진보성 유지는 거대양당체제에서 가지는 ‘상대적’ 진보성, 그리고 진보진영의 인물 영입과 포섭전략, 선택과 배제를 통한 진보적 담론·정책 의제의 흡수전략 때문이다.

한편 이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총선 결과는 진보정치세력과 사회운동세력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비례대표제’는 제도권 정당체제의 진입 장벽을 허물고 대의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지만 단지 필요조건일 뿐이다. 비례대표제 효과가 무조건적으로 진보정당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002년 3월 ‘1인 2표 정당명부제’ 도입 이후 2004년부터 2020년 총선까지 의석수 10석 이상(의안 발의 조건)의 제3당은 17대 총선 민주노동당, 18대 총선 자유선진당, 19대 총선 통합진보당, 20대 총선 국민의당이고 21대 총선은 없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거에서 유권자 대중에게 제도권 정당을 견제, 경쟁, 대체할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아야 경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올해 4·15총선은 촛불운동 이후 첫 총선, 조국사태로 드러난 사회변화 요구에 대한 자유주의세력의 계급적 한계, 당리당략만 앞세운 20대 국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위성정당 논란, 코로나19 경제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적폐세력’으로 대표되는 보수우익정당 심판과 국회·정치개혁과 같은 단일하지 않은 선거 목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민주연합’ 지형과 진보정당들 중심의 ‘진보연합’ 지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조건에서 진보정당들의 대응은 제각각 달랐다. 민주노총은 정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지하는 진보정당과 후보를 선정하여 조합원의 지지를 호소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계급성과 대표성에 관한 것이다. 기성 정치 세력의 지배 질서에 도전하는 진보정당의 경우 새로운 정책 대안과 이데올로기를 기반한 계급적 성격과 대표성을 가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한국 진보정당들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계급성과 대표성이 약화되는 현상을 두드러지게 보이며, 원내 진입의 근본적인 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진보정치 운동의 주체와 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진보정치 철학과 계급성, 대표성이 약화되는 것을 보였다.

두 번째, 진보정당, 민주노총과 조합원대중 간의 연계성 약화가 심화되고 있다. 정당에서 개인이나 그룹, 단체의 결합은 이데올로기적 결합, 정치적 정체성, 조직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내구성을 기반으로 한 연계는 한 번의 선거투표로 끝나지 않고 심각한 외부의 정치적 충격에도 중단되지 않는다. 역으로 이 요소들이 제대로 결합되지 않으면 선거에서의 정당일체감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외부의 정치적 공격에 무너지기 쉽다. 현재 진보정당들은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분당과 이합집산을 거쳐 여러 군소정당으로 갈라져 있고, 민주노총과의 연계도 약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17대 총선 이후 21대 총선까지 진보정당 후보들이 단일화하지 않고 출마하여 경쟁했던 지역구가 17대 총선 4개, 18대 총선 10개, 19대 총선 5개, 20대 총선 18개, 21대 총선 21개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세 번째 문제점은 민주노총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포섭전략 강화와 이에 대한 대항전략의 부재다.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때마다 한국노총 인물을 중심으로 영입하며 ‘친노동성’을 확보해왔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총 간부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의 노동계 포섭전략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포섭전략은 진보정당의 분열로 더 강화될 수 있다. 진보정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가능성이 낮아질수록 포섭전략에 유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 코로나19와 대안사회, 그리고 권력관계

재난은 그 사회가 가진 문제들과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코로나19 경제위기에 서 드러나고 있는 고용과 일자리 문제는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체제와 성장체제의 위기와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발생은 자본주의에 심각한 타격을 주며 기존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 흐름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본격화되자 대응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고용유지 정책은 최소화한 채 ‘기업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촛불의 힘은 대통령을 바꾸고 4·15총선에서 보수우익정당을 심판했다. 그러나 자본계급과 노동계급의 권력관계는 바꾸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촛불운동, 미투 운동, 남북 4·27 판문점 선언, 김용균 비정규노동자의 사망사고,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조국사태, 코로나19 위기 등을 통해 시민사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국가와 남북관계, 국제질서를 요구하고 있다. 구 경제체제와 성장체제의 패러다임 전환과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안사회 담론과 정치지형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치지형 변화를 만드는데 핵심은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은 국가, 경제, 시민사회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 균형을 유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유일무이한 대중단체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국가의 강제력에 맞서 가장 강력한 대중운동을 조직할 수 있는 조직된 시민 권력이자, 대안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구심점이기도 하다. 그리고 하층계급의 경제적 이익을 의식적으로 추구하고 경제 정의와 형평성을 추구하는 대중단체로써 다른 사회운동 및 지역공동체 조직과 연결될 때 사회운동 네트워크 전반의 권력을 신장할 수 있다.

특히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통일조국, 민주사회 건설의 그 날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을 선언”한 민주노총은 임금 인상과 같은 경제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시민사회운동단체와 연대하여 시민사회 공동체의 힘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요구된다. 정치지형 변화에 시민사회운동단체 역할도 중요하다. 노동조합과 진보정당들의 연대도 단지 의석수에 맞춘 협애한 관점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과 민중 세력 강화, 시민사회운동과의 연대로 중간 계급과의 동맹을 이루어내어 권력관계를 바꿀 것에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 ‘노동’의 부재,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것인가?

코로나19는 이후 다양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이전 체제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사회 변화를 위해 나아갈 것인가? 민주노총과 시민사회운동단체도 전환점에 서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해 고용불안의 정도를 최소화하고 제한적 복지 정책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사회 담론 마련과 권력관계 변화를 위해 나아갈 것인가? 진보정당들도 분당 이후 쌓아온 진보정치세력 간의 갈등과 혐오의 벽을 넘어서지 못한 채 이대로 계속 갈 것인가?

운동과 정당의 관계에서 무엇이 우선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닌 권력관계 변화를 위해 연대하여 공동의 경험을 만드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조합원 직접정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직접정치를 구현할 것인지, 새로운 사회 담론이 반영된 의제로 대중의 힘을 발동하여 지역사회의 정치변화를 만들어내는, 진보정당의 다원화에서 연대로 선거를 돌파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노동정치, 진보정치 강화를 위한 새로운 역량이 만들어질 수 있다.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한 때다. 이것은 상호 갈등을 생산하는 언어를 중단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관계가 될 때 가능할 것이다.

1. 들어가며

2020년 올해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담긴 해다. 전태일 열사 50주기, 전노협 창립 30주년, 민주노총 창립 25주년 그리고 민주노동당 창당 20주년이 되는 해다. 몸을 불사르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쳤던 22살 청년 노동자 전태일의 꿈은 노동 운동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형성된 연대의식 결과 1990년 민주노조 전노협이 창립되고 사회개혁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1995년 민주노총이 결성되었다. 그리고 “생산의 주역이며 사회개혁과 역사발전의 주체”로 열망했던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2000년 전농, 빈민단체와 함께 대중정당인 민주노동당을 창당했다. 이후 진보정당은 몇 차례의 분당과 이합집산을 거쳐 현재 노동당, 녹색당,¹⁾ 민중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이 있다.

이번 총선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촛불운동 이후 첫 번째 총선이자 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는 첫 번째 총선이었다. 또한 20대 국회 임기 내내 당리당략에만 매몰되어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외면했던 국회, 조국사태를 거치며 촛불운동 요구를 담아낼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의 계급적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진보정당들은 정치적 기회로 인식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전개된 전지구적 경제위기와 사회위기는 정부와 정당들의 위기에 대한 해결능력을 요구하였다. 재난은 그 사회가 가진 문제들과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또한 위기를 풀어나가는 정치 주체들의 정치철학과 대응 방법론 또한 드러나기 마련이다. 진보정당들 또한 동일한 과제를 가지고 있었다.

14대 총선 이후 28년만의 최고치 투표율 66.2% 속에서 이루어진 4·15총선은 더불어 민주당의 승리와 미래통합당의 참패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이 지지했던 진보정당들(정의당, 민중당, 노동당)은 군소정당화 되었다.²⁾ 민주노총은 “적폐세력청산, 노동개혁

1) 녹색당은 탈성장, 생태주의, 풀뿌리민주주의, 평화 등을 목적으로 2011년 10월 30일 녹색당 창당발기인대회 이후 2012년 설립한 정당이다.

2) 4·15총선 결과 진보정당 비례대표 득표율은 정의당 9.67%, 민중당 1.05%, 녹색당 0.21%,

세력심판, 진보정치 확장을 위한 총선투쟁승리”를 목표로³⁾ 했지만 민주노총이 지지했던 진보정당 총선 후보 107명 중 3명(정의당 비례대표)만이 당선되는 결과를 가졌다. ‘진보정치 1번지’라 불리는 울산 동구·북구, 경남 창원 성산구에서도 모두 낙선했다. 지난 20대 총선 때 세 지역구에서 진보정당 후보가 모두 당선된 것과 상반되는 결과다.

4·15총선은 노동운동세력을 포함한 진보정치운동세력에게 엄중한 평가가 요구된다. 선거 평가는 하나의 시점만을 두고 평가하기 힘들다.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변화, 진보정당의 분당 역사와 진보정치세력 간의 관계, 민주노총을 비롯한 사회운동세력의 관계 변화 등이 반영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는 분명하다. 이 보고서는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정당 정치를 위한 연구 과제를 탐색하는 단계로서 이번 총선 현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거대양당 180석과 103석의 의미

4·15총선은 더불어민주당 180석, 미래통합당 103석의 결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에 서의 2016년 20대 총선, 촛불운동 이후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와 2018년 7대 지방선거에 이어 코로나19 사회재난에서의 21대 총선까지 보수우익정당은 모두 제2당으로 참패했다. 한국사회 변화를 원하는 유권자의 힘으로 이루어진 결과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권위주의, 재벌 기득권과 분단 기득권 세력을 대표하는 보수우익정당의 연이은 참패는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 보여주기도 한다.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넘어선 직접민주주의, 재벌중심 경제구조 개혁,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확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대안사회 담론 마련은 진보·개혁세력에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당체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우익세력을 제외한 ‘왼쪽’ 공간 정치세력과

노동당 0.12%이다.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20, 「민주노총 2020년 70차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료집」, 189쪽.

진보적 대중의 대표성을 가지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은 진보정치세력의 대표성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역동적 요구를 담아내지 못한다. 4·15총선 결과 의석수 분포를 보면 지역구 253석 중 더불어민주당 163석과 미래통합당 84석, 비례대표 47석 중 더불어민주당 17석과 미래한국당 19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한 제1당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은 더불어민주당계 정당투표(더불어시민당 33.3%, 열린민주당 5.4%) 득표율 38.7%과 미래한국당 득표율 33.8%는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소한 표차라도 1위 후보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 효과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미래통합당은 선거에서 참패했으나 보수우익정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세력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외 진보정당들과 보수중도정당들은 군소정당화되었다. 제3당 없는 거대양당체제가 성립된 것이다.

양당제는 당의 온건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⁴⁾ 거대 정당의 주요 경쟁자는 오직 하나뿐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 균열과 시민사회의 역동적인 요구에 대해 대응할 필요성을 가지지 않는다. 양당제의 유지는 제도권 정당들 간의 ‘중간계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고, 선거에서 패배해도 야당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붕괴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양당제를 구조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바로 소선거구제이고, 선거법 개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미래당이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는 이유다. 또한 선거법 개정을 그들에게 맡길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왼쪽’ 공간의 진보적 대중의 대표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정당의 이데올로기 때문이다. 분단 체제와 독재 체제의 ‘민주-반민주’ 구도에서 획득한 자유주의 더불어민주당의 ‘진보성’은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며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와 대중의 계급적 이해를 담아내지 못한다.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패권국가의 세계 안보 체계와 신자유주의 질서를 수용하고 따르는 한 이에 저항하는 민중의 계급적 이해 또한 담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진보성 유지는 보수우익정당과의 거대양당체제에서 가지는 ‘상대적’ 진보성, 그리고 진보진영의 인물 영입과 포섭전략, 선택과 배제를 통한 진보적 담론·정책 의제의 흡수전략 때문이다.

4) E.E 샤프슈나이더, 이철희 옮김, 2010, 「민주주의의 정치적 기초」, 페이퍼드, 58쪽.

더불어민주당의 흡수전략과 포섭전략은 이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과 선거법을 악용하여 창당한 위성정당에서 잘 드러난다.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총선, 2012년과 2017년 대선 공약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약했다.⁵⁾ 그러나 작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소수정당과의 개혁 공조를 훼손하고 자유한국당과 함께 당리당략만을 앞세웠다. 결국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선거법은 비례의석 수를 한 석도 늘리지 못하고 소선거구제를 유지한 채 애초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려고 했던 국회 개혁 목적은 이루지 못했다.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선거연령을 만18세로 낮추어 참정권이 확대된 것이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을 악용하여 ‘비례 전용’ 정당을 창당했다. 위성정당은 대체로 권위주의 정부나 일당제 국가에서 정권을 잡은 정당이 민주적 다당제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만들어낸 명목상 정당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제5공화국 시기 군부정권이 관제야당을 창당한 사례가 있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모두 사라졌다.⁶⁾ 그러한 성격의 위성정당 창당은 비례대표제 의미까지 사라지게 만들고 유권자의 선택의 자유도 빼앗는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진보 성향 시민단체 모임인 정치개혁연합이 ‘비례대표 연합 위성정당’ 추진으로 정당성을 부여해준 결과이기도 했다.

한편 이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총선 결과는 진보정치세력과 사회운동세력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비례대표제’는 제도권 정당체제의 진입 장벽을 허물고 대의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지만 단지 필요조건일 뿐이다. 비례대표제 효과가 무조건적으로 진보정당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2002년 3월 ‘1인 2표 정당명부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있었던 총선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2004년부터 2020년까지 다섯 번의 총선 결과에서 독자적으로 법률의 개정 또는 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조건, 즉 10인 이상 의석수를 가진 제3당은 17대 민주노동당, 18대 자유선진당, 19대 통합진보당, 20대 국민의당이고 21대는 없다.⁷⁾

5)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2018.11.21., “더불어민주당, 연동형비례대표제 공약 파기 결코 안 돼”.

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2020.01.20. “[의감록]⑦ 선거법 개정안 통과과정과 위성정당 논의”.

7) 국회법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표 1〉 17대 - 21대 총선 결과 제1당, 제2당, 제3당 현황(단위: 석, %)

	제1당 의석수(지역/비례) 득표율/의석비율	제2당 의석수(지역/비례) 득표율/의석비율	제3당 * 의석수(지역/비례) 득표율/의석비율	비고
17대 총선 (2004.04.15.)	열린우리당 152(129/23) 38.3/50.8	한나라당 121(100/21) 35.8/40.5	민주노동당 10(8/2) 13.0/3.3	1인2표 정당명부
18대 총선 (2008.04.09.)	한나라당 153(131/22) 37.5/51.2	통합민주당 81(66/15) 25.2/27.1	자유선진당 18(14/4) 6.8/6.0	"
19대 총선 (2012.04.11.)	새누리당 152(127/25) 42.8/50.7	민주통합당 127(106/21) 36.5/42.3	통합진보당 13(7/6) 10.3/4.3	"
20대 총선 (2016.04.13.)	더불어민주당 123(110/13) 25.5/41.0	새누리당 122(105/17) 33.5/40.7	국민의당 38(25/13) 26.7/12.7	"
21대 총선 (2020.04.15.)	더불어민주당 180(163/17) 33.4/60.0	미래통합당 103(84/19) 33.8/34.3	없음	준연동형 비례대표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재구성한 것임.

- * : 독자적으로 의안 발의 또는 제출을 할 수 있는 10인 이상의 의석수를 가진 정당 기준임.

이중 대중정당으로서 노동·농민·빈민 계급성을 명확히 가졌던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이 유일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거에서 유권자대중에서 제도권 정당을 견제, 경쟁, 대체할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아야 경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4년 17대 민주노동당 국회 입성은 비례대표제 도입, 대중들의 민주주의 위기와 회복에 대한 요구⁸⁾와 같은 환경적 요인과 함께 학교급식운동, 부유세 도입, 상가임대차 문제와 신용불량자 문제, 장애인 연금법 제정 등의 운동을 전개하며 계급적 대표성을 알려내어 신생 정치 세력으로써 대중들에게 인식된 민주노동당 활동이 상호작용한 결과였다.

있다.

8)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 주도하에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하자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며 광화문 등에서 탄핵 반대 촛불 운동이 진행되었다.

3.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올해 4·15총선은 촛불운동 이후 첫 총선, 조국사태로 드러난 사회변화 요구에 대한 자유의세력의 계급적 한계, 당리당략만 앞세운 20대 국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위성정당 논란, 코로나19 경제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적폐세력’으로 대표되는 보수우익정당 심판과 국회·정치개혁과 같은 단일하지 않은 선거 목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민주연합’ 지형과 진보정당들 중심의 ‘진보연합’ 지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조건에서 진보정당들의 대응은 제각각 달랐다. 민주노총은 정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지하는 진보정당과 후보를 선정하여 조합원의 지지를 호소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계급성과 대표성에 관한 것이다. 미국 정치학자 키V. O. Key의 정의에 따르면, 정당은 유권자의 표를 구하기 위한 선거 운동 제도로서 사회의 공동 문제에 대한 견해를 통해 이미지가 형성되고 유권자들에게 명성을 얻게 된다. 정당은 유권자에게 사회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정보를 주는 지름길 역할을 하는데 이데올로기, 인물, 정책 의제가 바로 그것이다. 정당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정책에 기초한 활동으로 명성이 쌓아질 때 정당의 성장은 이루어질 수 있다.⁹⁾ 기성 정치세력의 지배 질서에 도전하는 진보정당의 경우 새로운 정책 대안과 이데올로기를 기반한 계급적 성격과 대표성을 가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한국 진보정당들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계급성과 대표성이 약화되는 현상을 두드러지게 보였다.

녹색당은 당원 총투표를 통해 정치개혁연합 비례대표 연합 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으나 민주당의 “이념 문제와 성소수자 문제” 발언으로 3월 18일 지도부 회의 끝에 연합 정당 참여 방침을 철회했다.¹⁰⁾ 민중당은 1월 5일 중앙위원회 특별결의문에서 “조직된 노동자·민중의 힘을 모아 총선투쟁 승리”¹¹⁾를 강조했던 것과 달리 민주노총 등 사회운동단

9) 김윤철, 2012, 「정당」, 37쪽.

10) 녹색당, 2020.03.18.,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연합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11) 민중당, 2020.01.05, “조직된 노동자·민중의 힘을 모아 총선투쟁 승리하자!”, 민중당 제5차

체가 비판하는 위성정당 성격의 정치개혁연합 비례대표 연합 정당 참여의사를 밝혀 논란이 되었다. 이후 민주노총 선거방침¹²⁾에 따라 철회되었으나 정당 민주주의와 계급성과 대표성의 취약한 면을 드러냈다. 정의당은 조국 장관 임명 동의 당론 결정을 거치며 주요 지지기반 계급·계층이 누구인지 혼란을 겪고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서 당 이데올로기와 정책을 기반으로 성장한 활동가보다 명망 있는 외부 인사를 중요시하는 등 인물 중심의 선거 전략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였다.¹³⁾ 이와 같은 현상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회 진출을 이루기 위한 선거 전술의 혼란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본질에는 원내 진입의 근본적인 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진보정치 운동의 주체와 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진보정치 철학과 계급성, 대표성의 약화가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다. 진보정당들은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민중당이 4월 10일 코로나19 경제 위기 해법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선거 공약을 발표했지만 앞서 위성정당 참여 의사 논란을 거치며 집중 받지 못했다.

선거에서 진보정당의 계급적 대표성은 지역구 당선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진보정당의 권력 자원이자 지지기반인 대중의 힘으로 거대정당 후보들을 누르고 당선되었을 때 사회적으로 진보정당의 계급적 대표성은 인정받을 수 있다. 과거 민주노동당이 노동자·농민·민중의 대표성을 가졌던 것은 민주노총의 배타적지지 관계뿐만 아니라 17대 총선에서 울산 북구와 경남 창원시을, 18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시을과 경남 사천시와 같은 노동자·농민 밀집 지역구에서 소선거구제를 돌파하고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대중의 힘은 20대 총선에서 울산 동구와 북구, 경남 창원 성산구에서 진보정당 후보 당선을 통해 보여주었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서 진보정당의 지역구 당선자는 한 명도 없다. 진보적 대중의 힘을 발동하는 ‘정치’의 질적 변화보다 비례대표 당선의 양적 변화를 중심으로 추구한 결과이기도 하다.

중앙위원회 참가자 일동 특별결의문.

12)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 2020.03.17., “비례위장정당 참여한 녹색당에 대한 지지 철회, 이후 같은 사례도 동일한 원칙 적용, 엄중 대처하기로”.

13) 레디앙, 2020.05.15., “올바른 총성평가와 정의당 혁신을 고민하며”.

제공성과 대표성 문제는 민주노총도 가지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 대규모 사업장과 중소 사업장, 남성과 여성, 청년과 중장년, 이주노동 등 노동 계급 내 계급의식 균열과 미조직 노동에 대한 대표성은 노동정치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이다.

두 번째, 진보정당, 민주노총과 조합원대중 간의 연계성 약화가 심화되고 있다. 정당에서 개인이나 그룹, 단체의 결합은 이데올로기적 결합, 정치적 정체성, 조직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내구성을 기반으로 한 연계는 한 번의 선거투표로 끝나지 않고 심각한 외부의 정치적 충격에도 중단되지 않는다.¹⁴⁾ 역으로 이 요소들이 제대로 결합되지 않으면 선거에서의 정당일체감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외부의 정치적 공격에 무너지기 쉽다.

현재 진보정당들은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분당과 이합집산을 거쳐 여러 군소 정당으로 갈라져 있다. 민주노총과의 관계는 현안이 생겼을 때 기자회견이나 토론회를 하는 사업성 관계를 가지고 있다. 선거 투표에서도 민주노총과의 결합이 약화되고 있다. 17·18대 총선에는 민주노총의 배타적지지로 민주노동당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고, 민주노총의 통합진보당 배타적지지 철회 이후 19·20대 총선에는 민주노총의 후보 단일화 선거방침으로 선거에 결합을 높였으나, 21대 총선에는 민주노총의 진보정당 지지 선언과 조합원 투표 방침을 정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 결과 17대 총선 이후 21대 총선까지 진보정당 후보들이 단일화하지 않고 출마하여 경쟁했던 지역구가 17대 4개, 18대 10개, 19대 5개, 20대 18개, 21대 21개로 증가하고 있다. 17대 총선 당시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의 대표성을 명확히 가졌던 것과 비교하면 제공성과 대표성이 명확하지 않은 현재 진보정당의 ‘다원화’는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층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표 2〉 17대 - 21대 총선 시기 진보정당 후보 경쟁 지역구 현황

	지역구 수	진보정당 경쟁관계(지역구 수)
--	-------	------------------

14) Roberts Kenneth M, 2002, “Party-Society Linkage and Democratic Representation in Latin America”, Canad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udies 27(53), p.6~7.

17대 총선	4개	민주노동당-사회당(4개)
18대 총선	10개	민주노동당-진보신당(10개)
19대 총선	5개	진보신당-통합진보당(5개)
20대 총선	18개	노동당-녹색당-정의당(1개) 노동당-정의당(3개) 녹색당-민중연합당(1개) 녹색당-정의당(1개) 민중연합당-정의당(12개)
21대 총선	21개	노동당-민중당(1개) 노동당-정의당(1개) 민중당-정의당(19)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재구성함.

17대 총선에서 21대 총선까지 노동자 밀집 지역구인 울산 동구·북구와 창원 성산구의 단일 후보 출마와 당선 현황을 보더라도 진보정당 후보 당선에의 기본 조건은 ‘단일화’인 것을 알 수 있다. 17대 총선의 울산 북구와 경남 창원시을, 18대 총선의 경남 창원시을, 20대 총선의 울산 동구·북구와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당선은 모두 단일 후보일 때, 후보와 지역 노동 정치 간의 연계성이 있을 때, 민주노총의 투표 방침이 명확하고 선명할 때 가능했다. 물론 선거에서의 진보정당 후보 당선에는 단일 후보 조건 외에도 여러 요건들이 필요하다. 정부 성격, 타정당과 후보 경쟁 구도 등에 따라 환경적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외부적 조건을 압도하고 통제할 수 있는 주체적 요인을 갖추었을 때 선거 승리는 가능할 수 있다.

〈표 3〉 17대 - 21대 총선 울산 동구·북구, 창원 성산구 진보정당 단일 후보와 당선 현황

	17대 총선	18대 총선	19대 총선	20대 총선	21대 총선
울산 동구	단일 후보	단일 후보	단일 후보	단일 후보	민중당-노동당
	×	×	×	무소속* 김종훈 당선	×
울산 북구	단일 후보	단일 후보	단일 후보	단일 후보	단일 후보
	민주노동당 조승수 당선	×	×	무소속 윤종오 당선	×
경남 창원 성산구	단일 후보	단일 후보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단일 후보	민중당-정의당
	민주노동당 권영길 당선	민주노동당 권영길 당선	×	정의당 노회찬 당선	×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재구성함.
- * :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민중의꿈 진보정치세력이 2017년 10월 민중당 창당 과
도기 중 무소속으로 출마함.

예전부터 노동자의 계급투표 불일치는 진보정치에서 중요한 화두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계급의식이 동일하지 않은 조건에서 민주노총 상층의 투표 방침만으로 조합원의 투표를 진보정당에게 이끌어내기 힘들다. 계급의식은 계급에 기반한 분열의 한 차원으로, 소득 분배, 경제적 불평등과 정반대로 작동할 수 있다.¹⁵⁾ 한국의 경우 권위주의 정권 시기 노동운동세력의 억압으로 노동계급의식이 성장하지 못한 채 정권의 일자리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으로 빈곤과 불평등이 감소했던 경험은 계급에 기반한 정치 균열을 약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IMF, 금융위기, 코로나19 경제위기 등을 통해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체험하고 신자유주의와 노동유연화 정책을 수용했던 보수 정권과 정당들의 문제를 깨달아가고 있다. 이것은 <표 4>의 2020년 민주노총 조합원 정치의식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태도 중 ‘만족’ 비율은 9.5%에 불과한 반면 ‘근본적으로 바뀌야 한다’ 52.7%, ‘점차 바꾸면 살만하다’ 29.6%로 사회 개혁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집권세력에 대한 태도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지지철회’와 ‘강력비판’이 56.2%를 차지하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진보정당’이라 보는 것은 17.5%에 불과, ‘보수정당’이라 보는 것은 52.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정치사업을 할 때 강조해야 하는 것으로 ‘엘리트 정치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노동자 직접 정치’가 59.0%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촛불운동의 결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한계를 인식하고 “조합원을 정치 주체로서 형성하여 노동자 직접 정치를 강화”¹⁶⁾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사 결과는 민주노총 정치위원회의 조합원 정치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조건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5) 게오르게 A. 쿠르베타리스 지음, 박형신·정현주 옮김, 2006, 「정치사회학」, 일신사, 245쪽.

16)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2020.03.02., “2020년 민주노총 정치사업 수립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분석 보고서”, 18쪽.

〈표 4〉 2020년 민주노총 정치사업 수립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질문〉 현재 한국의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대체로 만족 9.5%
- ②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52.7%
- ③ 점차 바꾸면 살만하다 29.6%
- ④ 잘 모르겠다 8.1%

〈질문〉 현재 문재인 정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니 지켜야 28.0%
- ② 적폐청산, 사회개혁, 민생경제 되는게 없으니 지지를 철회 30.3%
- ③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게 비판해야 25.9%
- ④ 잘 모르겠다 15.9%

〈질문〉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보수정당 26.9%
- ② 보수정당이지만 개혁의지가 있다 25.4%
- ③ 진보정당 17.5%
- ④ 잘 모르겠다 30.2%

〈질문〉 민주노총이 정치사업을 할 때 강조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① 엘리트 정치인에 의존하지 않고 노동자가 스스로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정치교육, 정치 투쟁을 강화 59.0%
- ② 평상시는 바쁘니 선거철에 지지할 정당이나 후보를 정해주었으면 좋겠다 3.2%
- ③ 노동자가 스스로 정치를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평상시부터 정당과 협력해야 한다 20.5%
- ④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이니 정치 사업은 필요 없다 17.3%

- 자료 :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2020.03.02., “2020년 민주노총 정치사업 수립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분석 보고서”.

민주노총 조합원은 노동자 계급을 무시하는 기성 정당 정치가 아닌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민주노총의 정치교육 강화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자 직접 정치’가 무엇인지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진보정당의 계급성과 대표성이 강화되고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가능할 수 있다. 민주노총이 특정 정당의 지지방침을 세운다고 해서 조합원의 정당일체감이 바로 형성되는 것도 아니다. 정당을 통한 집단의 가치, 태도, 행동을 학습하는 과정, 즉 정치사회화(political socialization)¹⁷⁾를 거쳐야만 정당과의 일체감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과거 민주노동당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997년 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승리21’ 임시대책기구를 구성한 후 진보정당 건설 운동 추진 결과 2000년 민주노동당을 창당했다. 그리고 2004년 첫 총선까지 조합원의 민주노동당 지지흐름을 보면, 단순히 민주노총 지도부의 지

17)게오르게 A. 쿠크베타리스 지음, 박형산·정현주 옮김, 2006, 「정치사회학」, 일신사, 256쪽.

침만으로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과 민중을 대표하는 민주노동당의 활동과 더불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계급의식과 정당에 대한 정치사회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1999년, 2001년, 2003년 민주노총 조합원의 민주노동당 지지 변화 흐름

연도	대상	민주노동당 지지	지지 정당 없다
1999년	전체	25.7%	57.4%
2001년	전체	23.1%	54.5%
2003년	전체	49.0%	51.0%

- 자료 : 김영수, 2007, “민주노총의 정치 활동과 조합원”, 한국정치연구 16집 2호, 89쪽.

세 번째 문제점은 민주노총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포섭전략 강화와 이에 대한 대항전략의 부재다.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때마다 한국노총 인물을 중심으로 영입하며 ‘친노동성’을 확보해왔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총 간부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김현정 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서필상 전 사무금융노조 부위원장, 권택홍 전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이흥석 전 경남본부장, 조택상 전 현대제철노조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 출신 후보가 선정된 지역구는 5개이고, 이 외 공천 신청을 한 이정훈 전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울산 북구), 백순환 전 대우조선노조 위원장(경남 거제)까지 포함하면 더 많아진다.¹⁸⁾ 더불어민주당의 노동계 포섭전략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표 6〉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 민주노총 간부 출신 후보 현황

성명	주요 노동조합 경력	지역구
김현정	전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경기 평택시을
권택홍	전 민주노총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 제2·3·6대 위원장	대구 달서구갑
서필상	전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부위원장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이흥석	전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경남 창원시성산구
조택상	전 현대제철노조 위원장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18) 참여와혁신, 2020.03.05., “본격 총선레이스, 거대 양당 노동계 후보는?”.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 공식적인 선거연대를 통해 민주당의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민주노총은 ‘노동자 정치세력화’ 강령과 “현장의 노동자 정치의 단결을 이루어 내고 전체 진보정치의 토대를 확대 강화”¹⁹⁾한다는 정치방침에 따라 보수정당 후보로 출마 할 수 없다. 임기 이후라 하더라도 민주노총 간부 시기에 이루었던 조직적 성과를 개인의 업적으로 ‘사유화’하여 보수정당 후보로 출마하는 행위는 조합원에게 민주노총 정치방침에 역행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21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 성산구의 경우 단일화 없이 출마한 노동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홍석(전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민중당 석영철(전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 정의당 여영국(전 금속노련 조직국장·정의당 국회의원)으로 세 명이었다. 경남 지역의 조합원 시선으로 본다면 진보정당들 후보들과 민주노총 정치방침에 어긋나는 민주노총 간부 출신의 보수정당 후보와의 경쟁은 정치방침을 지키지 않는 간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조합원의 탈정치화로 연결될 수 있다.

한편 민주노총 간부 출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주요 노동조합 경력을 살펴보면 정규직 중심 노동조합 출신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와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포섭전략 강화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노동 계급 갈등과 균열로 이어지고 민주노총의 정치방침도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민주노총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포섭전략은 진보정당의 분열로 더 강화될 수 있다. 진보정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가능성이 낮아질수록 포섭전략에 유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주요 사업목표를 정치위원회 활성화, 현장 정치 역량 강화 등을 통한 노동정치 기반 확대로 두로, 중장기 정치사업 기본방향으로 현장의 노동자 정치 단결과 전체 진보정치의 토대 확대 강화를 주요하게 설정하고 있다.²⁰⁾ 민주노총의 사업목표에서

19) 민주노총, 2020, 「민주노총 2020년 70차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료집」, 190쪽.

중장기 정치사업 기본방향은 ▷ 현장의 노동자 정치의 단결을 이루어내고 전체 진보정치의 토대를 확대 강화 ▷ 민주노총 요구안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 투쟁, 정치교육 등을 진보정당과 공동으로 추진 ▷ 민주노총 정치사업의 실천, 현장 정치의 단결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실전단을 상설화로 세움.

매년 정치위원회 활성화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²¹⁾ 올해 4·15 총선을 계기로 정치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엄중한 정세인식을 가지고 깊이 있는 총선평가와 진보정치 토대 마련을 위한 요소를 찾아내어 사업 목표를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4. 코로나19와 대안사회, 그리고 권력관계

재난은 그 사회가 가진 문제들과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코로나19 경제위기에 서 드러나고 있는 고용과 일자리 문제는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체제와 성장체제의 위기와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정부 방역 정책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를 안정적으로 할 수 없고 이동과 유통의 제한으로 소득 상실을 겪고 있는 불안정 고용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한국의 경제체제에서 소외되었던 대상이었다. 일부에서는 전염병으로 인한 일시적 위기라고 보기도 한다. 코로나19 경제위기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것은 자본주의가 이미 1990년 후반부터 장기침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장기불황에 빠진 상태였고, OECD와 IMF 신자유주의 국제기구도 2000년대 후반 들어 재정안정과 인플레이션 통제에서 임금과 고용 중심으로 정책의 무게를 전환하고 있었다는 점이다.²²⁾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발생은 자본주의에 심각한 타격을 주며 기존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 흐름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본격화되자 대응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고용유지 정책은 최소화한 채 ‘기업 살리

20) 민주노총, 2020, 「민주노총 2020년 70차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료집」, 189-190쪽.

21) 2017년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 사업목표로 “정치사업 활성화와 정치위원회 위상 강화”, 2018년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사업 강화”, 2019년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역할 재정립 및 활성화”, 2020년 “정치위원회 활성화”로 세워지고 있다(민주노총 제66차 정기대의원대회회의자료, 제67차 정기대의원대회회의자료).

22) 윤홍식, 2020.05.15., “코로나19 위기와 복지국가의 귀환?”, 코로나19 사회적 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연대회의 연속워크숍 자료집, 11쪽.

기’에 집중하고 있다. 과거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마다 가졌던 기업 지원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5월 10일 취임 3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다음날 5월 11일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배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공공병원과 의료인력 확충 강화가 요구되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려고 한다. 원격의료는 전경련이 발표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요구 중 하나다.²³⁾ 또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하여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겠다고 하면서 일자리 질과 디지털화로 인해 확대되는 불안전 노동에 대한 방지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노동을 배제하고 자동화에 기초해 생산성 향상을 추진했던 과거 개발국가의 성장전략과 유사하다. 코로나19 위기를 기회삼아 재벌을 중심으로 한 자본세력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 획기적 강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 “국민취업지원제도 조속히 시행”,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남과 북의 “평화공동체” 등의 언어를 사용하며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 정책과 재정 지원 성격은 기업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본세력에게 기울어진 권력관계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거대양당체제로 구성된 21대 국회는 자본세력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는 정치공간이 될 수 있다.

촛불의 힘은 대통령을 바꾸고 4·15총선에서 보수우익정당을 심판했다. 그러나 자본계급과 노동계급의 권력관계는 바꾸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촛불운동, 미투 운동, 남북 4·27 판문점 선언, 김용균 비정규노동자의 사망사고,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조국사태, 코로나19 위기 등을 통해 시민사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국가와 남북관계, 국제질서를 요구하고 있다. 구 경제체제와 성

23) 지난 3월 25일 발표한 전경련의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에 “의료인-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등의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

장체제의 패러다임 전환과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안사회 담론과 정치지형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 공적 의제를 노동자와 민중의 요구와 지향에 부응하는 정치로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 정치’²⁴⁾를 강화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운동 정치를 통해 사회 공공성 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한 방법이다. 선거 시기에만 작동하는 ‘유권자’ 민주주의에서 생활에서의 ‘주권자’ 민주주의로 확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보정당들은 계급성과 대표성을 ‘대중’ 속에서 강화하고 제도권 정당과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중당의 노원 주민 직접정치 운동본부의 ‘공공재 마스크 보급 운동’은 참고하기 좋은 사례다. 이 운동은 정부의 마스크 5부제 시행 이전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구청이 일괄 구매해서 주민들에게 일일이 나눠줄 수 있는 대책을 세우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요구를 집단 민원운동으로 전개하여 구청이 정책 제안을 수용하게 만들고 차별없이 마스크를 지급받게 했다.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마스크를 공공재로 전환시키고 주민들의 ‘직접정치’를 통해 지방정부의 공공성이 이루어지도록 강제해 낸 것이다.²⁵⁾

정치지형 변화를 만드는데 핵심은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은 국가, 경제, 시민사회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 균형을 유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유일무이한 대중단체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국가의 강제력에 맞서 가장 강력한 대중운동을 조직할 수 있는 조직된 시민 권력이자, 대안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구심점이기도 하다. 그리고 하층계급의 경제적 이익을 의식적으로 추구하고 경제 정의와 형평성을 추구하는 대중단체로서 다른 사회운동 및 지역공동체 조직과 연결될 때 사회운동 네트워크 전반의 권력을 신장할 수 있

24) 조희연, 2016, 「투 트랙 민주주의 1권」, 서강대학교출판부.

운동 정치는 정치를 제도 정치 영역의 뒤편으로 규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제도 정치가 반영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이슈들을 쟁점화하고 대변하는 사회운동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가를 매개로 정치를 전체 사회에 대한 지배와 동일시하려는 것에 대해 대응하여 민중이 자신들의 요구와 지향에 부응하는 형태로 정치를 변화·확장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25) 만플러스, 2020.03.23. “재난 속에서 민중의 힘은 더 커진다”.

4·15총선 결과 서울 노원구갑의 민중당 정당득표율은 3.96%이다.

다.²⁶⁾ 특히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통일조국, 민주사회 건설의 그 날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을 선언”한 민주노총은 임금 인상과 같은 경제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시민사회운동단체와 연대하여 시민사회 공동체의 힘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요구된다.

정치지형 변화에 시민사회운동단체 역할도 중요하다. 국가 엘리트와 제도권 정당, 그리고 자본가의 유인과 포섭전략으로부터 시민사회운동의 자율성을 지켜내고 노동조합과의 견고한 연대로 시민 권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시민사회운동단체와 노동조합과의 연대 강화는 노동조합의 노력만으로 힘들다. 그 동안 시민사회가 노동시장 의제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하고, 자유주의 정부가 추진한 신자유주의적 시장개혁과 복지 강화,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제한적’ 복지 정책과 민주노총의 신자유주의 구조 조정 반대와 비정규직 철폐 요구 사이에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을 때 시민사회가 정부의 정책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²⁷⁾ 경험은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운동의 연대를 약하게 만든 주요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과 진보정당들의 연대도 단지 의석수에 맞춘 협애한 관점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과 민중 세력 강화, 시민사회운동과의 연대로 중간 계급과의 동맹을 이루어내어 권력관계를 바꿀 것에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4·15총선 결과에서 ‘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갑의 정의당 득표율 12.3%는 제도권 정당과 진보정당 간에 존재하는 중관계층의 지지 확보 가능성을 보여준다. 중요한 점은 노동계급 존재 없이 권력관계 변화를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26) 이철승 지음, 박광호 옮김, 2019, 「노동-시민 연대는 언제 작동하는가 : 배태된 응집성과 복지국가의 정치사회학」, 후마니타스, 32-35쪽.

27) 조효래, 2020, “〈서평〉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조합운동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론적 탐색 「노동-시민연대는 언제 작동하는가: 배태된 응집성과 복지국가의 정치사회학」”, 산업노동연구 26권 1호, 276~279쪽.

5. ‘노동’의 부재,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것인가?

코로나19는 이후 다양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이전 체제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사회 변화를 위해 나아갈 것인가? 민주노총과 시민사회운동단체도 전환점에 서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해 고용불안의 정도를 최소화하고 제한적 복지 정책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사회 담론 마련과 권력관계 변화를 위해 나아갈 것인가? 진보정당들도 분당 이후 쌓아온 진보정치세력 간의 갈등과 혐오의 벽을 넘어서지 못한 채 이대로 계속 갈 것인가?

운동과 정당의 관계에서 무엇이 우선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닌 권력관계 변화를 위한 ‘시민사회-노동조합’의 연대, ‘노동조합-진보정당’과 ‘시민사회-노동조합-진보정당’간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모색, 그리고 연대하여 공동의 경험을 만드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조합원 직접정치가 무엇인지, 새로운 사회 담론이 반영된 의제로 대중의 힘을 발동하여 지역사회의 정치변화를 만들어내는, 진보정당의 다원화에서 연대로 선거를 돌파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노동정치, 진보정치 강화를 위한 새로운 역량이 만들어질 수 있다.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한 때다. 이것은 상호 갈등을 생산하는 언어를 중단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관계가 될 때 가능할 것이다.